

# 대학 진학률과 고용 수용능력

金 海 植  
(釜山大 行政學科)

사회적·경제적 고용 수용능력의 확대에 의해서 고졸자들이 흡수될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대학 진학 과열현상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정책과 고용 창출정책간에 있어서의 안배가 균형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서 론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학 진학 과열현상에 대한 분석은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고등교육에 대해 사회적 가치관을 지나치게 부여한다는 문화적 이론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이론 모형에 의한 분석은 주로 미시적인 측면과 의식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미시적 측면이라 함은 대학 진학 희망자 개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학 희망자에 대한 심리적, 행태적, 가정 배경적 변수를 토대로 대학 진학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함을 말한다. 또 의식구조 측면에서의 분석이라 함은 고등교육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교육을 사회적 지위 상승의 한 방법으로 보아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바로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바로 고등교육에 대한 과열현상을 자아내게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모형의 측면에서 보다는 거시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대학 진학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대학 진학 현상을 분석하고자 함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정에서이다.

첫째, 급변하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과연 대학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의식구조에 입각한 출세관, 고학력 숭배주의란 문화적 요인만으로써 계속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산업화, 도시화 등 근대화 과정은 사회·경제적 고용 수용능력의 제고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회적 변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고졸자들이 대학 진학만을 유일한 사회적 가치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식구조에서 탈피, 대학 이외의 사회·경제적 고용기회가 고졸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주된 가정은 대학 진학률과 사회적 고용 수용능력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정의 실증적인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학 진학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모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대학 진학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문화적 요인

한국인들의 의식구조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형식주의, 체면주의는 교육 자체에서 오는 내실적 기대감보다는 교육을 사회적 출세의 도구로 삼는 교육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교육관에는 대졸자들의 개인적 능력보다는 일류 대학이나 비일류 대학이나, 서울소재 대학이나 지방 대학이나 하는 외형적, 체면주의적 의식구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 입시자들로 하여금 일류명, 서울명 등을 낚게 하고 자기의 능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덜어놓고 일류 혹은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에 붙고 보자는 투기심, 요행심을 불러일으켜, 대학 진학 과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또 한국 사회에 내재하는 귀속주의적 사회 풍토로 인해 기업체와 정부기관 등 직장파 사회의 승진 및 고용기회에 있어서 소위 일류 대학 출신자들은 이미 조직내에 기반을 잡고 있는 선배들의 비호하에 비일류 대학 출신보다 단순히 선후배 관계라는 귀속적인 인간 관계에 근거하여 승진이나 고용기회에 유리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회적·문화적 풍토하에서는 대학 진학을 둘러싼 일류 대학에 대한 선호병과 과열현상은 좀처럼 불식되기 어렵다.

고학력 숭배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풍토에서는 개인의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학벌에 대한 맹목적인 인정과 내우로 인해 좀처럼 대학 진학 과열화현상을 막기 어려

울 것이라는 것이 문화적 요인에 근거를 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sup>1)</sup>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학 진학 희망자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그리고 가정의 소득 정도 등이 대학교육 열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의 학력이 높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 직업과 소득이란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교육 수준을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고등교육 열망이 높으며,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과 소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 수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sup>2)</sup>

또 교육비가 가계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서 보면, 도시 근로자와 농가 등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들의 고등교육비(대학생이 2명일 경우)가 전체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3.1%와 90.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비율로 인해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sup>3)</sup>

### 3) 인적 자원 이론(human capital theory)

인적 자원 이론가들에 의하면 인적 자원은 교육을 더 받은 자가 덜 받은 자보다는 더 생산적이며, 따라서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라는 이론적 전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산업체의 고용주들은 맹목적으로 고등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피고용자로 받아들여려고 한다는 것이다.<sup>4)</sup>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고졸자와 대졸자간의 현저한 임금 격차는 바로 이와 같은 인적 자원 이론에 입각하여

1) 윤정일, *고등교육인시정책*(한국교육개발원, 1984), pp. 4~6.

2) 최현숙, *한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3) 임희섭, *사회적 평등과 발전*(서울: 정음사, 1983), p. 128.

4) Stanley Fischer and Rudiger Dornbusch,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3), pp. 337~341.

고등교육 수혜자를 이들보다 수준이 낮은 교육 수혜자보다 일률적으로 더 대우를 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팽배한 까닭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적 자원 이론에 반격을 가한 Berg는 교육성취도와 직업성취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erg에 의하면 직업 불만도와 이직률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며, 따라서 그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우선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계속적인 투자는 현명한 것이 못 된다는 극단적인 견해까지도 피력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인적 자원 이론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항상 긍정적인 수익률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수익률이 국가나 개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 4) 전문직업 집단 압력 이론

이 이론은 Rawlins와 Ullman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으로서, 이들에 의하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권위와 법적 지위를 재고시키는 방법으로서 자기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육 조건을 까다롭게 재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은 압력은 고용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문 직업인들 자체에서 오는 압력으로서 이와 같은 압력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요를 재고시키며 교육경쟁을 가열화시킨다는 이론이다.

#### 5) 사회적 가치 배분 방법으로서의 학위 수여 이론

이 이론은 Jencks et al.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서, 즉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고소득을 가

적으로 하는 직업의 수는 제한된 데 비해 이를 원하는 자의 수는 너무 많아 고소득 직업을 둘러싼 수요·공급간의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사회에 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급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 배급제도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는 고소득 직업을 배분하고 다른 집단에는 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배급제도의 실현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소득 직업의 배분 기준을 고등교육의 수혜 여부로 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은 많은 인적 및 물적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많은 집단들이 이와 같은 경쟁에서 탈락된다.”<sup>7)</sup>

#### 6) 준공공재(quasi-public good)로서의 고등교육

고등교육은 경제체로서의 하나인 준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준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은 가분성과 불가분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불가분성으로서의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에서 도출되는 편익이 사회에 골고루 미쳐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가분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등교육이란 경제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든 받지 않은 자이든간에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에게 혜택이 불가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며 고등교육 수혜자나 비수혜자를 막론하고 이들에게 모두 공분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이와 같은 집합체적 재화의 성격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즉 정부로부터의 투자를 합리화한다.

또 한편으로 고등교육이란 준공공재는 가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간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 즉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고등교육 수혜자가 비수혜자보다는 사회

5) Ivar Berg, "Education and Jobs", *The Great Training Robbery* (Boston: Beacon Press, 1971), p. 104.  
6) V. Lane Rawlins and Lloyd Ullman, "The Utilization of College Trained Manpower in the United States,"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Margaret S. Gorden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4).  
7) Christopher Jencks, Marshall Smith, Henry Acland, Mary Jo Bane, David Cohen, Herbert Gintis, Barbara Heyns, and Stephan Michelson,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72), p. 223.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차별적인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가분성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의 준공공재 성격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며, 공공부문의 투자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차등적 혜택은 고등교육이란 재화에 대한 교육 수요자간에 경쟁심을 조장시킬 수도 있다.<sup>8)</sup>

### 7)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려 할 때 고등교육에 대해서 과연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비용·편익 분석에 의거해서 생각할 것이다. 대학이나 직업전선에 뛰어들 것이나 양자 택일을 두고 고졸자들의 결정 행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 즉 수업료, 교재비, 하숙비 등 제반 교육비를 고려할 것이다. 대학교육비가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할 경우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것이다.

둘째, 고졸자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직업전선에 투신하는 것을 포기함을 말한다. 고졸자들의 진학은 앞으로 수년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것은 바로 대학 진학으로 인한 소득 기회의 상실, 즉 기회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선택한 자들은 일단 대학교육을 완성하고 나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직접 직업전선에 뛰어들 고졸자들이 벌 수 있는 소득보다는 대졸 후 높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바로 대학 진학 동기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고졸자들의 대학 진학은 반드시 위에서 든 금전적인 요인이라 측면에서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람들은 대학을 다닌다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느끼며,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와 인생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인간과 교제하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

다는 가치관이 바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비용과 대학교육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간적으로 볼 때 먼저 발생하는 반면, 대학교육을 마친 후 직장을 구한 다음 도출될 수 있는 이득은 나중에 발생된다는 즉 비용·편익간의 시차적 성격에 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가짐으로써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이 대학을 다님으로써 투입된 교육비보다 반드시 더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비를 투자로 보면 이 투자에 대한 이자는 대학교육이 끝난 후 직업을 가짐으로써 벌 수 있는 소득으로 미래에 지불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나 되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바로 대학교육에 들어간 투자에 대한 반환율인 것이다. 반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는 이 반환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10% 이하로 하락되었다.<sup>9)</sup> 이와 같은 하락현상은 대학 진학률이 '60년대에 비해 '70년대에 높아진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즉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임금 격차의 폭이 줄어들음을 말하며 이것은 대졸자들이 고등교육 투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반환률이 감소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감소된 반환률은 대학교육이란 경제체에 대한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경감시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의 공급이 감소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 인력 공급의 감소현상은 인력시장에서 대졸자들의 상대적 가치를 높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다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순환과정은 Hog Cycle 또는 Cob Web Cycle이라고 불

8) Bernard P. Herber, *Modern Public Finance* (Homewood: Richard D. Irwin Inc. 1983), p. 49.

9) Fischer and Dornbusch, *Economics*, p. 343.

리워지고 있다.<sup>10)</sup>

### 3.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했다.

<그림 1> 분석 모형



사회·경제적 변수로서는 도시화, 인구밀도, 산업체 종사자수, 인구 이동률 등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도시화, 인구밀도 등 도시의 크기와 밀집현상이 대학 진학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함이다. 또 산업체 종사자수와 인구 이동률은 경제적 고용 수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어졌는데, 즉 주민당 산업체 종사자수가 많고 전입 인구 이동률이 많은 지역일수록 적은 지역보다는 고용 수용능력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분포적인 변수로서는 20~60세 사이 인구, 60세 이상 인구 등으로 나누어서 포함시켰는데, 20~60세 인구층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층으로 보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공공부문 경제행위 변수로서는 1인당 세출 총액과 1인당 지방세액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고등교육이 준공공재로서 정부에 의해 투

자될 경우와 또 정부가 주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즉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주민으로 하여금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서 선택된 변수들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변수로서 투표율을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정치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지역이 대학교육열도 높을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위의 분석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의 5만 이상 되는 도시를 분석 단위로 하여 40개 도시를 사례로 1980년과 1983년의 총체적 자료에 의거해서 분석하였다.

### 4. 분석 결과 및 해석

<표 1>은 한국의 40개 도시에서 진학률을 포함한 각 도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구분포적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들과 공공부문 경제행위 변수들을 종합해서 요인 분석을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동 분석 결과 한국의 도시 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신흥 산업도시 등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된 도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대학 진학률의 요인계수(factor coefficient)는 신흥 산업도시에 높게 負荷(-.55)되고 있다. 이것은 신흥 산업도시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낮음을 말해 주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대학 진학률이란 변수가 이들 도시의 특성에는 하등 관련이 없는 변수임을 말해 주고 있다. 신흥 산업도시의 특성으로서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 것 외에도 주민당 고등학교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흥 산업도시에서는 주민당 산업체 종사자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입 인구 이동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층도 신흥 산업도시에서는 높은 편이나 60세 이상의 인구는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 인구가 신흥 산업도시에 높게 분포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신흥 산업도시에서의 주민당 산업체 종사자수, 전입인구 이동률, 그리고 20~

10) *Ibid.*, pp. 343~344.

〈표 1〉 대학 진학률에 대한 요인 분석

	대 도 시 factor 1	중 소 도 시 factor 2	산 흥 산 업 도 시 factor 3
대 학 진 학 륜	.18	.18	-.55*
고등학교학생수(인구1,000명당)	-.26	.15	-.40*
도 시 화	.84*	-.10	-.01
인 구 밀 도	.62*	-.41	.19
20 ~ 60 세 인 구	.39	-.30	.47*
60세 이 상 인 구	-.46	.24	-.64*
산업체종사자수(인구10만명당)	.08	-.01	.87*
인 구 진 입 륜	-.08	.02	.88*
투 표 율	-.74*	.36	-.14
1 인 당 세 출 총 액	-.08	.02	.46*
1 인 당 지 방 세 액	.37	-.11	.83*

\* p<0.5

60세 인구증이 늘다는 것은 신흥 산업도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는 경제적 고용 수용능력을 더 크게 갖고 있음을 요인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변수인 투표율은 대학 진학률과는 같은 요인에 負荷되고 있지 않는데, 주민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도를 나타내는 투표율은 자녀들의 대학 진학 기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학 열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흥 산업도시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제행위와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1인당 세출 총액과 1인당 세금액이 신흥 산업도시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신흥 산업도시에서는 주민 1인당 도시 정부로부터의 세출 총액과 주민당 세금 부담액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흥 산업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용 수용능력 변수, 공공부문 경제행위 변수, 고등학교 학생 비율 및 도시화 등을 포함해서 이들

〈표 2〉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표준회귀계수

1 인 당 담 세 액	.12
고 등 학 교 학 생 율	-.09
인 구 진 입 율	.03
1 인 당 세 출 총 액	.22*
산 업 체 종 사 자 수	-.71**
도 시 화	-.18
R <sup>2</sup>	.31

\* p<.05 \*\* p<.01

여러 변수들이 대학 진학률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키 위해 〈표 2〉에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주민당 산업체 종사자의 변수가 가장 높은 표준회귀계수(Beta)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주민당 산업체 종사자수란 변수가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도시화 자체와 인구밀도는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크기에 관계없이 고용 수용능력이 많은 신흥 산업도시에 있어서는 고졸자들을 흡수할 산업체 수용능력이 큰 것을 말해 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등학교 학생 비율도 대학 진학률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 비율의 격차가 대학 진학률의 격차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전입인구 이동률 자체는 대학 진학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세출 총액이 약하나마 正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세출 총액이 많은 도시일수록 적은 도시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교육이 준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positive spillovers effects)가 있으므로 공공부문 즉 정부에 의한 이와 같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대

도시, 중소도시 및 신흥 산업도시에 관계없이 1인당 세출 총액, 즉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 노력이 큰 도시일수록 고졸자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육, 통신, 교통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이와 같은 부문에의 투자는 투자비의 과중함과 이들 재화들의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와 긍정적인 파급효과의 성격으로 인해 시장경제체제를 통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즉 정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더 많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된 1인당 세출 총액이 대학 진학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이란 공공부문의 투자를 주민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지출행위 작용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비해 1인당 담세액은 대학 진학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담세액 과다가 주민 개인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즉 세금의 소득효과가 작용하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표 3>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도시 집단(제주, 강릉, 전주, 진주, 원주, 속초, 대구, 청주, 대전)과 낮은 집단(창원, 삼천포, 여수, 안양, 천안, 성남, 인천, 마산, 의정부, 구미)간에 있어서 산업체 종사자 비율, 고등학교 학생 비율, 도시화, 인구 전입률, 1인당 세출 총액 및 1인당 지방세 등을 비교한 도표이다. 진학률이 높은 집단은 평균 54%이며 낮은 집단은 33%이고, 이들 두 집단간에 있어서 특히 주민 10만 명당 산업체 종사자수는 진학률이 높은 집단에서

<표 3> 진학률이 높은 도시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비교

구 분	진 학 륜 (%)	산업체 종사자수 (주민 10만 명당)	고등학교 학생비율 (주민 1,000명당)	도시화율* (%)	인 구 전 입 륜 (%)	1 인 당 세출총액 (단위:천원)	1 인 당 지방세액 (단위:천원)	
진학률이 높은 도시 집단	제주	60	7,369	6.88	.47	2.00	105.8	33
	강릉	58	1,186	8.73	.32	2.07	134.9	26
	전주	57	3,087	9.02	1.02	1.74	92.6	29
	진주	56	6,143	9.13	.55	.71	73.1	28
	원주	52	2,005	6.80	.37	1.24	81.6	24
	속초	51	455	5.56	.18	2.70	125.0	26
	대구	51	7,565	6.23	4.90	1.08	90.9	35
	청주	50	9,672	10.16	.76	3.36	95.1	30
	대전	50	4,185	7.25	2.00	2.37	62.5	32
평 균	54	4,630	7.75	1.17	1.92	95.7	29	
진학률이 낮은 도시 집단	창원	38	30,943	7.69	.36	6.58	370.6	66
	삼천포	36	2,226	6.15	.16	-1.77	92.3	14
	여수	36	2,920	8.00	.44	-1.88	85.7	20
	안양	36	11,076	5.14	.73	7.81	78.8	56
	천안	36	6,507	11.84	.38	1.65	59.2	22
	성남	35	9,087	3.84	1.04	4.38	76.7	30
	인천	34	18,041	5.00	3.05	2.29	112.3	46
	마산	34	12,554	6.13	1.04	2.02	99.1	34
	의정부	28	3,586	7.59	.36	3.05	69.0	29
구미	19	39,761	7.44	.30	2.60	99.2	57	
평 균	33	13,670	6.88	.79	2.77	114.3	37	

자료: 네부부, 「한국 도시 연감」, 1981, 1984.

\* 1983년 한국 전체 인구당 각 도시 인구 비율

〈표 4〉 대학 진학률이 높은 도시 집단과 낮은 도시 집단간의 T-Test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F Value	2-Tail Prob.	Pooled Variance Estimate			Separate Variance Estimate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산업체 종사자 수	10	.1367	.126	.040	15.36	.001	2.09	17	.052	2.19	10.29	.053
대학진학률이 높은 도시 집단												
	9	.0463	.032	.011								

〈표 5〉 대학 진학률이 높은 도시 집단과 낮은 도시 집단간의 Discriminant 분석

Function	Eigenvalue	Percent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	Canonical Correlation	After Function	Wilks Lambda	Chi-Squared	D.F.	Significance
1*	.44597	100.00	100.00	.5553565	0	.6915792	6.4536	5	.2645

표준 Discriminant 기능계수	Func1
1인당 지방세	-.32958
도시화	-.34996
1인당 세출 총액	-.20390
고등학교 학생수	-.46158
산업체 종사자수	1.27460

4,630명, 낮은 집단에서 13,670명으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표 4〉에서 T-test 분석을 하였는데 역시 두 도시 집단간의 산업체 종사자 비율의 차이에 유의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도시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분리 기능에 있어서 산업체 종사자 비율, 도시화, 고등학교 학생비율, 1인당 세출 총액, 1인당 지방세 가운데서 어느 것이 이들 두 집단간의 분리 기능에 가장 기여하는 변수로서 작용하는가를 보기 위해 Discriminant 분석을 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기능에 의해서 이들 두 도시 집단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분리 기능에 산업체 종사자 비율이 역시 가장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 5. 결 론

한국 도시를 분석 단위로 한 본 연구에 있어

서 도시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고용 수용능력과 도시 정부의 공공지출 노력이 한국 도시에 있어서의 대학 진학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학 진학 과열화 현상에 대한 분석은 학부모들의 파다한 교육열, 출세주의 교육관, 고학력 숭배주의 등 주로 문화적 요인들을 들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고졸자들이 반드시 문화적 이데올로기에서 설명하려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형식주의, 체면주의, 고학력 숭배주의 교육관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려 하여 사회적으로 대학 진학 과열현상이 유발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고졸자들에게 사회적·경제적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면 굳이 출세주의적 교육관에만 따라 대학 진학만을 유일한 길로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경제적 고용 수용능력의 확대에 의해서 이들 고졸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대학 진학 과열현상은 해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고용 창출 및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정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경제영역에 균형 있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준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와 사회적·경제적 고용 창출에 있어서의 정책적 안배가 대학 진학 과열현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